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12시

국문제목: 그 많던 ‘중립’은 어디로 갔을까?: 냉전기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영문제목: A Study on the Diplomacy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s ‘Neutral Countries’ from 1948 to 1968

발표자: 김도민(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이메일: knehiet@kangwon.ac.kr

발표 요약문

본인은 2018년 아시아연구소의 박사논문 작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연구를 진행하여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했다. 본 세미나의 발표는 먼저 본인이 본 연구 주제를 고민하게 된 문제의식, 연구사적 의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끝으로 왜 지금-여기 한반도에서 ‘탈냉전 중립·비동맹’의 역사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냉전의 ‘주변부’와 ‘주변부’의 관계사

세계 역사학계는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의 책임소재를 묻기에 급급했던 냉전 연구(the Cold War Studies)에서 벗어나 냉전사(Cold War History)라 불리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들이 한창이던 상황이었다. 특히 새로운 문서고의 개방과 함께 세계 냉전사는 지구적 전환(global turn) 및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아가 냉전의 중심과 중심의 관계에서 확장하여 중심과 주변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성과들이 국내외에서 제출되었다. 한반도 관련 관계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한미관계사, 북중관계사, 북소관계사 관련하여, 즉 중심(미국·소련·중국)과 주변부(남한·북한)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됐다. 국외에서는 베스트의 『냉전의 지구사(global cold war)』 대표되는 중심과 주변부의 관계를 다룬 냉전사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냉전 시기의 국내외 연구들이 중심을 벗어나 주변부까지 시야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주변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냉전의 주변부 행위자들에게 중심부와 관계가 매우 중요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본인의 연구는 중심부와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나 혹은 영향력은 미미했더라도 주변부와 주변부를 통해 탈냉전 중립, 탈식민, 평화 등을 꿈꾸던 소중한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고자 했다.

2. 남북한 관계사의 모색: 남북의 새로운 만남과 경험 그리고 변화하는 외교와 담론¹⁾

냉전의 최전선이자 ‘주변부’이며 탈식민 신생 독립국 남·북한에게 또다른 ‘주변부’이자 신생 독립국 ‘중립국’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그에 따라 남북한의 외교와 담론은 변화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그동안 파편적으로 다뤄진 냉전 시기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정책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분기의 과정을 시계열적·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자료를 정리할수록 냉전의 최전선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는 비슷한 시기에 ‘쌍생아적’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시기적으로 (비록 이유와 목적은 달랐지만) 남·북한 정부 모두 1957년 최초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중립국’을 방문했다. 1957년 북한은 주요 아시아·아프리카 비사회주의 국가들(인도·인도네시아·버마·이집트·이라크 등)과 무역협정을 맺거나 무역대표부를 양국에 설치했다. 반면 남한 정부는 1954년부터 밀려드는 중립과 평화에 대해 공산세력의 ‘중립공세’이자 ‘평화공세’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립과 평화를 주도하는 ‘중립국’들을 비판했다. 그러다가 남한 정부는 1957년 유엔총회에서 증대하는 중립국과 기권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국’ 외교에 수동적으로 나섰다.

1960년대 들어 남·북한은 ‘중립국’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외교경쟁을 펼쳤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이룩한 경제발전의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초청하는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펼침으로써 그들과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를 맺었다. 나아가 북한은 소련과 갈등 속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를 외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세력과 더욱 친밀한 대외관계를 맺어나갔다.

반면 남한에서 1960년 4·19 이후 수립된 과도정부·민주당정권·군사정부는 이승만정권의 대미(對美)일변도의 진영외교를 비판하면서 계속되는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 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다. 남한 정부는 ‘중립국’ 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중립국’과 관계를 맺은 북한을 상대해야 했다. 남한 정부는 ‘두 개의 한국’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일관성있게 지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후발 주자로서 남한 정부는 만약 어느 ‘중립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하여 단교하는 순간 해당 지역 외교에서 북한에게 더욱 밀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중립국’에는 ‘두 개의 한국’ 원칙을 고수한 반면 영향력이 큰 중립국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묵인하는 형태를 취했다.

1957년이 남·북한이 ‘중립국’과 처음 만난 시점이었다면, 1965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립국’ 외교의 분기점이었다. 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의 무산은 양극적 냉전질서에서 탄생했던 반동정신의 시효가 종료하고, 이제 다극적이고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냉전질서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1) 이하 내용은 「[나의 논문을 말한다]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웹진 ‘역사랑’ 2020년 6월(통권 6호)」(<http://www.koreanhistory.org/8034>) 중 일부를 가져왔다.

이 시기 북한이 보기에 사회주의 진영은 분열했고 미국은 더 이상 소련 같은 강대국과 적대하기보다 약소국을 공격하는 이른바 “새로운 랭전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교조주의 및 수정주의라는 좌·우경 기회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를 추구했다. 또한 북한은 1965년 남한의 베트남파병과 한일협정에도 위기의식을 느끼며 중국과 소련이 베트남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위기 돌파의 방법으로서 대국(大國)에 의존하기보다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중립국’ 외교도 1965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군사정부 및 제3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는 1965년 베트남에 파병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남한은 베트남파병을 이유로 1965년 개최 예정이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피초청국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프랑스는 남한의 베트남 파병을 이유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남한 정부는 베트남파병이 낳은 ‘중립국’ 외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65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을 1968년 실행했다. 이는 남한 정부가 1960년대 미소의 접근과 다극화하는 냉전질서 속에서 더 이상 기존의 양극적 냉전문제로서 유엔에서 한국문제 표결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했다. 박정희정권은 새로운 냉전의 시대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전방위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중립국’ 외교를 모색했다. 이처럼 남·북한 ‘중립국’ 외교는 공히 1960년대 중후반 ‘주체적’ ‘자주적’ 전환을 모색하고 추진했다.

자세한 외교정책의 시계열적 정리에서 발견하는 남북한의 (비)대칭성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남북한 주요 인사들의 새로운 만남이었다. 아마 냉전이 아니었다면 한반도 사람들이 머나먼 중동과 아프리카, 심지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방문하거나 그들을 한반도에 초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 라틴아메리카 쿠바의 대표로서 ‘체 게바라’는 북한을 방문했으며 1962년 아프리카 카메룬 사절단은 남한을 방문했다. 아마 당대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북한 신문에 실린 아프리카 방문객들의 사진은 매우 생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1950,60년대 한반도에 살았던 외교행위의 주체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려 했을까. 1960년대 남·북한 주요 인사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인식을 가졌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밝힐수록 당대 담론의 지층들(반식민-냉전-경제발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48년부터 1968년이라는 20년 동안에 걸친 남·북한의 외교정책과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탈식민과 냉전, 분단 그리고 경제발전 등이 어떻게 상호교차하며 시기에 따라 무엇이 더 주도적이고 부차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북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경쟁에서 드러나는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이 흥미로웠다.

3. 왜 지금-여기 한반도에서 '중립'의 역사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냉전의 최전선 남북한과, 냉전을 벗어나려는 주변부의 관계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탈냉전이 도래했고, 서구의 연구들은 냉전을 이제는 역사로서 연구한 지도 20년이 넘어간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반도 분단과 정전이라는 엄연한 대립의 구도 속에서 여전히 냉전의 경험을 '역사'로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즉 냉전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 가능한지가 논쟁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다룬 '중립'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커져가는 적대와 혐오라는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분단과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안의 이분법적 적대성을 강화시켜왔다. 적대하는 극단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났을 때 이들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데 급급했다. 우리는 타자와 만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고 배제하는 역사의 경로를 걸어왔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펼쳐지는 극단과 혐오의 모습들은 어쩌면 이분법적이고 적대적인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자화상일지 모른다. 본 연구는 우리의 냉전 시기 역사적 경험에서 잃어버린 '중립'을 다시 호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잃어버린 타자에 대한 감각까지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²⁾

2) 이 문단의 내용은 본인의 글인 「잃어버린 '중립'을 찾아서: 4·19와 『광장』의 60주년을 맞아」, 『대학신문』(2020년 3월 15일자,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0>) 내용을 일부 가져와 수정한 것이다.